

주간 입법 동향

Vol. 63 (2022. 5. 23 ~ 5. 2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건설/부동산	①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
	ESG 조세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공정거래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공포 법령	건설/부동산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부과 및 농지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
입법/ 행정예고	인사/노무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유경준 (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p>■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p> <p>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p> <p>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p>	뉴스1 22.05.19. 尹정부 '재건축 활성화' 앞두고… 조합장 '선출·자격 조건 강화' 속속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4684861	22.05.17.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홍석준 (국민의힘)</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p> <p>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p> <p>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p> <p>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p>		22.05.19. 제안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J2P0P4J1T3Y1D8R1U0T3F8A3Q9I9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 제안이유</p> <p>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p>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p>21.01.28. 제안</p> <p>21.02.1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뉴시스 22.05.21. '플랫폼 자율규제안' 민간에 맡긴 공정위… "온플법 폐기는 아냐"</p> <p>https://newsis.com/news/?id=NISX20220520_0001879523</p>	<p>21.06.30. 소위 상정</p> <p>21.11.18. 소위 상정/ 제안설명</p> <p>21.11.24. 소위 상정/ 제안설명</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p> <p>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p> <p>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p> <p>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p> <p>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p> <p>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p> <p>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p> <p>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p>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p>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P1D0W1H2R8Z1U6K1I7B3F7G9F3E7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농·어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해 영세 농·어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p> <p>따라서 불법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어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어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매일경제 22.05.17. 농업법인 '농지투기' 차단…8월부터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p> <p>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4293/</p>	<p>21.08.17. 일부개정</p> <p>22.05.18. 시행</p>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 제안이유</p> <p>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도급에 따른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제 별표35 토목 신설)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p>		22.05.20. ~ 22.06.29.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38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한국경제][기사]'면피성 서류'만 잔뜩 늘린 중대재해처벌법(2022.05.23.)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2354511>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두고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함. 경영자 처벌이 초점이다보니 사전 조치를 다했다는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 작업만 두 배 정도 늘은 상황. 문제는 실제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올 1분기 건설현장에서 총 5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지난해 1분기보다 사망자가 늘음. 전문가들은 현장 사고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입법의 한계라고 지적함. 업계는 책임 건설 기능인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각 건설 현장에 공종별 책임 기능인을 정하고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그룹 내 작업자의 부주의나 미숙련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임. 경영자 처벌이라는 접근으로 현장을 위축시키기보다 근로자가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

[서울신문][기사]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추진(2022.05.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3500096&wlog_tag3=naver

주요내용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반영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됨.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경영지도와 자문을 제공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공단 측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공사와 공단 등에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안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

[국민일보][기사]에쓰오일, 알 카타니 대표이사 외국인 중대재해 처벌 1호 되나(2022.05.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6131&code=61122021&cp=nv>

주요내용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 범정부적 차원의 조사가 시작됨. 울산경찰청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으며, 조사는 사고가 난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공정)' 관련 설비부터 시작됨.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만들어야 함.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기업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이번 사고로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겨례][사설]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에 앞서 해야 할 일(2022.05.23.)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4041.html>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발표함. 위험 발생의 주체로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 단체가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채 5개월이 되지 않은 지금, 법 제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산안법의 1200개 조문이 지나치게 지시·규제적이라 하면서, 세부 규정없이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의무 부여를 통해 좀더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불평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보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중대재해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대재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lee@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인사/노무팀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